

“배제없는 포용 중요... APEC 디지털혁신기금 창설을”

文 대통령, APEC 정상회의 참석
개도국 역량강화 지원 마중물로
디지털 격차, 양극화 심화 이어져
공정한 기회·협력 등 ‘포용’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하우스에서 열린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우리는 작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인터넷, 디지털경제 로드맵’에 합의했고, 한국은 의장국이 제안한 로드맵 이행 매커니즘을 지지한다”며 “로드맵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APEC 디지털혁신기금’ 창설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의 APEC 하우스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 이같이 언급한 뒤 “각국 경제주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개도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한국은 기금 창설과 운영에 건설적으로 기여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협력과 노력이 디지털의 미래를 포용적 성장으로 이끌 것”이라며 “국가간 디지털 격차를 줄여 공동 번영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함께 이뤘지만, 그 과정에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됐다. 우리 정부는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채택했다”고 소개하고 “포용성은 국가간의 관계에서도 중요하다. APEC 회원국 간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기회와

호혜적 협력을 보장할 때 우리는 함께 잘 살고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은 포용적 성장, 포용적 사회,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라며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살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며 성별·지역·계층·연령에 상관없이 국민 단 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성의 증진은 APEC 회원국들의 공동 과제”라며 “앞서서 노력한 국가들의 포용정책과 모범사례가 회원국 간에 공유되기를 바란다”며 “포용적 APEC 공동체” 달성을 위한 ‘포용성 정책 사례집’ 제작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APEC 미래비전(APEC Post-2020 Vision)’ 의의를 시작했다”며 “여기에서도 회원국 모두가 함께 잘사는 공동체라는 포용의 개념이 핵심적인 가치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배제하지 않는 포용’은 더욱 중요하다”며 “디지털 격차가 경제적 격차와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기에 특히 중소기업·교육·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혁신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아태지역 기업의 9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는 지역 내 포용적 성장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며 “한국은 개도국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2006년부터 APEC 이터닝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고, 이달 말에는 필리핀과 공동으로 APEC 미래교육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시대에 소비자 보호는 중요한 과제”라며 “국경을 넘는 전자적 거래가 일상화된 시대에 소비자 보호도 국가간 협력이 필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 조선산업 지원책 22일 발표 금융지원·수요 활성화·연구개발 지원

정부가 계속되는 불황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산업을 지원하는 대책을 추가로 내놓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오는 22일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현안조정회의에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한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활력제고 방안에는 금융지원과 수요 활성화,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조선사·기자재업체 상생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원에는 금융권 보증과 제작비 대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등을 원활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조선 기자재업체는 오랜 불황으로 신용등급이 낮고 대출한도가 가득 찬 탓에 수수계약을 체결하고도 금융권의 보증이나 제작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해왔다.

친환경 선박과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도 주요 내용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조선 기자재업체 간담회에서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친환경, 자율운항 기술 등 미래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을 통해 세계 1위 경쟁력 유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선사와 기자재업체의 상생도 도모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활력제고 방안 발표 후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조선사, 조선기자재사가 조선업 상생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이미 공공 발주와 경쟁력 강화, 구조조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한 바 있지만, 조선업은 여전히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세종=최신종 기자 grandtrust@

“밀덕 모여라~” 국내 유일 군사문화축제 열려

(군대·총기 정보에 대한 매니아)
군장비·의식주 등 문화콘텐츠 모아
부스 46개 마련... 2000여 명 찾아

전국 8도에서 몰려든 군사문화동호인들이 18일 경기도 성남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개최된 제26회 ‘플래툰 컨벤션’으로 몰려 들었다.
플래툰 컨벤션은 군사전문지 월간 플래툰이 매년 개최하는 국내 최대의 군사문화 축제로, 군사문화인 군대조직의 조직문화인 군대문화 달리, 군장비와 의식주를 소재로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아우르는 용어다.
전날부터 시작된 이번 행사는 군사문화 관련 판매 및 전시 부스 46개, 2000여 명에 달하는 인파가 행사장을 찾았다.
행사장 입구에는 갑주를 착용한 조선장수와 광복군, 현대 한국군 및 핑크색 총을 든 여전사까지 참가자들은 각자의 개성을 뽐냈다. 판매 부스 중 한 곳은 최근 인기 스마트폰 게임 ‘소녀전선’에 등장한 국산복합소총 K-11을 제작해 눈길을 끌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최신 군사트렌드인 ‘엘렉 방식의 군용총기 레일시스템을 3D 프린터로 제작해 완구용 K-11 소총에 장착한 전시물을 전시해, 육군



경기도 성남시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17일부터 18일까지 열린 플래툰 컨벤션에 참석한 판매자가 K-11소총 모형을 비롯해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전력지원물자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비주류 문화로 저평가 받고 있는 군사문화산업이지만, 가까운 일본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 및 유럽 등지에서는 새로운 문화산업과 관련된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행사 양일 간 과급된 시장 효과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모두 합산하면 수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행사관계자는 “참여부스의 매출 등은 업체들이 공개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산출은 어렵다”면서도 “입장료와 부스신청비 등을 고려하면 이틀간 전국

에서 몰려온 상품들이 상당한 거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남에서 온 K 씨(38)는 “인파로 물리는 복잡한 행사장이라도 매년 참석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돌아간다”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동호인들을 만나 찾고 있던 아이템을 손에 쥐었을 때 일상의 피로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익명의 현역 군인은 “이곳에서 물건만 사고 파는게 아니다. 군과 관련된 좋은 정보와 아이디어를 얻고 갈 때도 많다”면서 “민·군교류의 중요한 역할을 플래툰 컨벤션이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전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n@

“개발제한구역 착공까지 2년 → 4년 완화”

국토교통위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관석 의원(남동읍)은 개발제한구역의 자동 환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또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등의 사유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해제가 결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 사업이 착공되지 않으면 그다음 날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개발계획의 수립 및 결정, 토지 등의 보상,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고

려하면 현행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2년’이라는 기간이 짧아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3년이 소요되며, 5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도 총 127개 사업 중 24개로 전체의 18.9%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재난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착공이 늦어진 경우에도 환원기간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에는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환원요건을 기존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2년’에서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4년’으로 완화한다.
재난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환원을 추가로 유예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세신화 기자 csh9101@

경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법적 하자... 철회해야”

경영계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적 공평성과 객관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철회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률 검토의견을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종료 후 법제처로 이송돼 심사 중이다.
경총은 “전문적 법률 조언을 받아 작성한 검토의견에서 개정안이 법적 공평성, 객관성, 단일성, 확정성 등 법적 차원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철회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우선 경총은 개정안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된 모든 시간’을 추가한 것을 지적했다.
노사 간 힘의 논리에 따라 사업장별로 다르게 정해진 ‘유급처리된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적용하면 같은 양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특정 사업장의 월 최저임금 부담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일주일에 2일(주요·토·일요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기업은 월 산정 시간 수가 최대 243시간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월 최저임금 부담이 202만 9050원으로 계산, 대법원 판결 기준(월 산정시간 174시간·월 최저임금 부담 145만 2900원) 대비 최대 40%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경총은 “무노동 유급시간이 많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져 이들 기업의 최저임금 부담이 늘고 근로자 간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